

정치적 판단에서 심리적 요인의 역할: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중심으로

이진안 최승혁 허태균*
고려대학교

기존의 연구에서 정치성향을 설명해온 변화에 대한 저항(우익권위주의)을 초월하여, 본 연구는 더 근본적인 심리적 요인인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y)이 정치적인 사안을 판단하는 데 끼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 참가자 206명은 한국사회에서 최근 10년간 크게 논란이 되었던 10가지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동의 정도와, 우익권위주의, 사회와 인간 각각에서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등을 측정하는 척도에 응답하였다. 우선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고, 정치적 사안에 대한 우익권위주의, 사회 및 인간에 대한 암묵적 이론, 자기-명명식 정치성향의 영향을 확인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안 판단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자기-명명식 정치성향에 의한 주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 소위 보수적인 결정을 하였다. 또한, 사회에 대한 암묵적 이론과 자기-명명식 정치성향 간의 상호작용효과도 확인하였다. 즉, 사회에 대한 가변론자 사이에서는 자기-명명식 정치성향에 따른 사안 판단의 차이가 작았지만, 불변론자는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소위 진보적인 판단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정치적인 사안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인 변인의 효과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y), 우익권위주의(RWA), 정치성향, 진보와 보수, 정치심리학

최근 한국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이슈들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정치적 입장이 다른 여·야 및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우병 촛불집회, 4대강 사업,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값 등록금, 무상 급식 등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토론과 협상을 통한 합의점 도출을 시도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내세우는 경우가 더 빈번했으며, 시민단체들 또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갈등을 키워왔다. 더욱이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갈등은 그들만의 갈등이 아닌 한국 사회 전반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YTN, 2012. 2. 25.). 문제는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 있는 것이 정치철학의 차이가 아니라,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인기영합주의(populism)라는 사실이며, 더욱이

* 교신저자 : 허태균,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02) 3290-2862, E-mail : tkhur@korea.ac.kr

국민들 스스로가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지각하는 비율이 높아가고 있다는 데에 더 큰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김형준, 2010; 정한울, 정원철, 2009).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이내영, 2011), 결국 이들의 행동은 유권자를 의식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유권자들이 실제로 정치적·사회적 갈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학이나 사회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갈등 쟁점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갈등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찾으려 노력해 왔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정치체제, 문화, 사회적 상황 등과 같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갈등의 원인 및 해결책을 찾는 경향을 보여 왔다(권오성, 한형서, 2008; 김형준, 2010; 이내영, 2011). 그러나 정치·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만 찾는 것은 관찰되는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거시적 관점의 연구와 함께 미시적 관점에서 개인의 태도 및 신념 등과 같은 심리적 원인을 탐구하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현상은 물론, 갈등의 원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정치 분야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시도하는 심리학계의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당인 등 비교적 이념성향이 공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치사회적 쟁점 사안들에 대한 도덕적 가치 판단을 분석한 연구들(예, 정은경, 손영우, 2011; 정은경, 정혜승, 손영우, 2011),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성별, 연령 등)과 스스로 생각하는 정치성향 등에 따른 우익권위주의(Right-Wing Authoritarian), 사회적 지배성 성향(Social Dominance Orientation) 등의 심리학적 특성의 차이를 탐색한 연구(예, 홍기원, 이종택, 2010), 질적 연구방법론(Q방법론)을 사용해 일반인들의 정치인식유형을 새롭게 구성한 연구(예, 김도환, 황상민, 최윤식, 2011)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그동안 심리학계에서 등한시되어 왔던 정치적 이념 및 갈등의 원인에 대한 개인의 내면적 특성을 밝히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은 여러 정치·사

회적 쟁점들의 판단의 원인에 기저하는 일반인들의 심리적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정은경과 손영우(2011), 정은경 등(2011)의 연구에서는 정당인들을 대상으로 일부 사안들(간통죄, 용산재개발사건)에 대해서만 도덕적 가치 판단을 다루었다. 또한, 홍기원과 이종택(2010)의 연구에서는 정치성향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쟁점 사안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특히, 정치적인 판단의 기저에 있는 심리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 자기-명명식 정치성향 등과 같은 정치성향 변인을 들어 설명하는 순환론적인 모순은 기존의 정치심리 연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정치적 성향과는 내용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심리적 요인이 정치적 사안 판단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정치·사회적 쟁점들을 판단하는 데 사회 및 인간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우익 권위주의 등의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나아가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변화에 대한 저항

정치적 성향 혹은 이념(ideology)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Terence & Richard, 2003). 하지만 최근의 한 여론 조사를 보면, 대상자의 절반이상이 이념적 혼재층, 즉, 사안에 따라 자기-명명식 정치성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한겨레, 2011. 5. 15) 즉, 스스로 진보, 보수 혹은 중도라고 명명하는 것과 특정 사안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련의 정치·사회적 쟁점 사안들에 대한 태도 및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Jost, Glaser, Kruglanski와 Sulloway(2003)는 메타 분석을 통해, 정치적인 성향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학적 변인들이 크게는 '변화에 대한 저항'과 '불평등의 수용'의 두 가지 요인으로 묶임을 밝혔다. 즉, 변화를 거부할수록, 그리고 불평등을 받아들일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것인데, 이러한 분석이 타당함은 추후의 경험적 연구들이 지지해 주고 있다(Jost & Amodio, 2012; Jost, Napier, Thorisdottir, Gosling, Palfai & Ostafin, 2007).¹⁾ 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문화적·정치적 특성에 따라서 ‘불평등의 수용’ 요인은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증거도 발견되었다. 즉, 동유럽 등지의 과거 사회주의를 채택했던 국가에서는 불평등을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Thorisdottir, Jost, Liviatan, & Shrout, 2007).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국가마다 다를 수 있는 문화적·정치적인 특징을 막론하고,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인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변화에 대한 저항을 측정하는 우익권위주의 척도가 불평등에 대한 수용을 측정하는 사회적 지배성 성향 척도(Jost 등, 2003)보다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다 잘 설명한다고 보고하고 있다.(홍기원, 이종택, 2010)

그러나 홍기원과 이종택(2010)의 연구에서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측정하는 우익권위주의 척도와 자신을 진보, 중도, 또는 보수라고 명명하는 자기-명명식 정치성향 간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서양의 연구에서는 우익권위주의 성향과 자기-명명식 정치성향이 높은 상관을 보였고(McHoskey, 1996), 따라서 자신을 보수라고 명명하는 사람들은 변화에 저항하는, 즉, 성향적으로도 보수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에서 두 개념간의 상관이 보고된 연구가 없다는 것은, 서양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보수라고 명

명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한국에서는 자기-명명식 정치성향과 변화에 대한 저항 성향이 다른 개념인지는 확인된 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측정하는 우익권위주의 척도가 한국에서도 스스로 소위 보수라고 명명하는 사람들의 성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변화가능성에 대한 관점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y)’은 사람들이 특정 대상을 바라보는 암묵적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질적으로 그 대상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잠재적인 관점을 의미한다(Dweck, Chiu, & Hong, 1995; Molden, & Dweck, 2006). 즉,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들이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특정 대상에 대해 변화 자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를 특정 대상에 대한 암묵적 이론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을 구분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변화’라고 했을 때,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은 변화에 대한 태도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다. 즉, 암묵적 이론에 따라서 대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총체적인 관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암묵적 이론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특징은 ‘영역-특정적(domain-specific)’이라는 점이다. 즉, 한 사람이 지능, 도덕성, 성격, 세상, 부끄러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변화가능성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Dweck, Hong, & Chiu, 1993). 두 번째 특징은 변화가능성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가변론자(incremental theorist)와 불변론자(entity theorist)로 구분된다는 점이다(Dweck 등, 1995).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년간의 종단적 연구 결과를 보면 지능이 변한다고 믿는 가변론자의 수학 성적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불변론자의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Black, Trzesniewski, & Dweck, 2007). 이 결과는 지능에 대한 가변론자가 변화가능성을 크게 지각하여 노력을 중시하고 학습동기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

1) 정치성향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소위 진보와 보수로 구분되는 단선적인 방법이 적절치 않음을 지적한 연구는 있었다(최석만, 국민호, 박태진, 한규석, 1990). 하지만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를 보면, 여전히 전통적인 좌익과 우익의 단선적인 분류가 실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데 유효한 예측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Jost, 2006). 또한, 특정한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사안에 대하여 주관적인 의견을 개진할 때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찬성과 반대, 즉 단선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분류를 진보와 보수 혹은 좌익과 우익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명명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단선적인 분류법인 진보와 보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할 수 있다. 이 외에, 인간, 성격, 도덕성, 사회 등에 대한 암묵적 이론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Chen, Chiu & Chan, 2009; Chiu, Dweck, Tong & Fu, 1997; Erdley, Cain, Loomis & Dweck, 1997; Erdley & Dweck, 1993; Hong & Chiu, 1999; Kammarath & Dweck, 2006; Levy, Stroessner & Dweck, 1998)을 종합해 보면, 가변론자들은 변화를 야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불변론자들은 현상을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개념을 국내의 정치심리학의 영역에서 연구한 바는 찾아보기 힘들다. Dweck 등(1995)은 암묵적 이론을 정리하면서, 이것이 인지 능력, 통제소재, 낙관주의, 정치적 태도 등 여타의 척도가 측정하는 속성과 다름을 밝히며, 보수적 성향을 측정하는 우익권위주의와도 다른 개념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정치적인 상황, 특히, 정치체제에 따른 암묵적 이론의 차이를 검증하고 이것이 사람들의 삶에 끼친 영향을 탐색한 연구는 일부 존재한다(예, Chen, Chiu & Chan, 2009; Hong & Chiu, 1999). 즉, Chen 등(2009)은 경직된 정치·사회 분위기로 인해 이직률이 매우 낮은 중국인들은 미국인들에 비해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으며, 따라서 특정 직업에는 그에 적합한 개인적인 특성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과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이는 사회에 대한 암묵적 이론이 이직률과 특정 직업에 적합한 개인 특성이 있다는 믿음을 매개하는 심리적 특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Hong과 Chiu(1999)는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홍콩인을 대상으로 사회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측정하였는데, 사회에 대한 암묵적 이론에 따라서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인 규범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밝혔다. 즉, 사회에 대한 불변론자들은 사회에 변화가 있어왔을 때, 그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적인 규범을 따르는 형태로 태도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사회에 대한 가변론자들은 불변론자와는 반대로 사회의 규범을 따르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두 연구 모두 정치체제에 따른 이직률이나 사회적 규범의 변화와 같은 특정 사회현상과 이에 따른 사람들의 태도 및 행동에 대해 사회에 대한 암묵적 이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암묵적 이론이 정치체제 또는 정치적인 사안 판단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영역-특정적인 암묵적 이론의 특징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성향에 영향을 줄 영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가 한 사회 내에 발생하는 사람들 간의 역동이라고 했을 때, 정치의 주체는 인간 그리고 그가 속해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존하는 다양한 정치적 이념은 본질적으로 ‘인간본성’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해 가며 발전해 왔다(Terence & Richard, 2003).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정치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및 인간에 대해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점은 정치적 판단에 있어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회’에 대한 암묵적 이론(Implicit Society Theory: IST)을 연구한 결과(Chen 등, 2009; Hong & Chiu, 1999)를 보면, 상기한 바와 같이 사회에 대한 불변론자들은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현재 존재하는 규범에 따르려고 노력하는 반면, 가변론자들은 현존하는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인간’에 대한 암묵적 이론(Implicit Person Theory: IPT)을 연구한 결과(예, Kammarath & Dweck, 2006)를 보면 인간이 변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반면,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어도 그것을 삼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변화가능성의 측면에서, 전자가 사람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며, 후자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불만이 있어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것이다.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변화에 저항하고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사회 및 인간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이 실제 행동에 상기한 바와 같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사회 및 인간에 대한 암묵적 이론은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심리적인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성향이 정치적 판단을 결정하는

순환론적 접근이 아닌, 개인이 사회와 인간을 가변적 혹은 불변적으로 보는 관점이 정치적 성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자기-명명식 정치 성향을 넘어서 변화에 대한, 그리고 변화가능성에 대한 심리학적 변인이 정치·사회적 쟁점 사안을 판단하는 데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사회 및 인간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관점이 정치적 사안 판단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자기-명명식 정치성향, 변화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우익권위주의 성향, 그리고 사회 및 인간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는 암묵적 이론을 변인으로 삼아, 이러한 변인들이 정치적 사안 판단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대상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22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강 과목의 필수 과제 중 하나로 진행하였다. 참가자 중 주어진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불성실 응답자 15명의 결과를 제외하여 총 206명의 결과를 분석했다. 남성 피험자는 77명, 여성 피험자는 128명, 성별 미응답자는 1명이었으며, 나이는 만 18세에서 38세의 분포(평균 21.14세, 표준편차 2.49)를 보였다.

측정 도구

우익권위주의

변화에 대한 태도를 묻는 우익권위주의 척도는 1950년 Adorno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Altemeyer(1996)를 비롯한 학자들이 이를 수정·보완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Zakrisson(2005)가 수정한 총 15문항의 축약판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수정척도는 문항의 수를 줄이고, 사회적 지배성 성향 척도와와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으며, 본래 30문항이었던 척도에서 신뢰도에 가장 적게 영향

을 끼치는 문항과 사회적 지배성 성향과 가장 큰 상관을 보이는 문항을 줄여나갔다. 이렇게 완성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2였다. 같은 척도를 활용한 Backstrom과 Bjorklund(2007)의 연구에서는 .78을, Bergh, Akrami와 Ekehammar(2009)의 연구에서는 .79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보고하였다.

이 척도는 현재 한국어로 번안하여 발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직접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이중 언어 사용자가 영어로 역번역하였으며, 이를 원본과 비교한 뒤 수정하여 최종 척도를 완성하였다. 이 척도는 6점 척도(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6=매우 동의한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문항 중 7문항은 역 채점 문항이다. 사용된 문항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급진적이고 부도덕적인 흐름을 타파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비록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지라도, 전통적인 방법에 맞설 용기가 있는 자유로운 사상가가 필요하다' 등과 같다. 본 연구에서 우익 권위주의 척도의 내적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409였다.

암묵적 이론

암묵적 이론을 측정하는 도구는 인간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3문항, 사회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3문항으로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관점을 묻는 암묵적 이론은 Dweck 등(199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Chiu 등(1997)은 .86을 Chen 등(2009)은 .90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보고하였다. 인간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관점을 묻는 암묵적 이론은 Levy, Stroessner와 Dweck(1998)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연구에서 .93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보고하였다.

이 척도들 역시 한국어로 번안하여 발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이중 언어 사용자가 역번역하는 과정을 거쳐 수정하여 최종 척도를 완성하였다. 이 척도는 6점 척도(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6=매우 동의한다)이며, 역채점 문항은 없다. 모든 결과는 낮을수록 불변론자에 가깝고, 높을수록 가변론자에 가깝도록 변환 코딩하였다. 사회의 변화가능

표 1. 선정된 정치적 사안이 해당기간 동안 기사화된 빈도

순위	사안	논란이 된 해(년)	기사빈도(회)
1	세종시 수정안	2010	24,123
2	한미 FTA	2011	16,787
3	4대강 사업	2009	12,790
4	미디어법	2009	7,804
5	용산참사	2009	6,871
6	반값 등록금	2011	5,838
7	북한 3대 세습	2010	3,163
8	전작권 환수	2006	3,047
9	줄기세포	2004	533
10	공무원노조	2002	301

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은 ‘일부 현상은 우리가 바꿀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성향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 등의 문항이, 인간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은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하기도 하지만, 그를 정의하는 중요한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 등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 및 인간에 대한 암묵적 이론 척도의 내적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518, .690이었다.

자기-명명식 정치성향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은 다음 중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에 9점 척도(1: 매우 보수적이다, 9: 매우 진보적이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해석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분석을 할 때는 역채점하여 높을수록 보수적이도록 변환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정치적·사회적 쟁점 사안 선정

종속변인으로 사용할 사안은 지난 10년 간 유명 포털, 대형 일간지 등에서 발표한 각 해 10대 뉴스 등을 종합하여, 그 중에서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을 일으켰다고 판단되는 사안 10가지를 선정했다. 사안을 선정할 때에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하였는데, 먼저 소위 진보와 보수로 불리는 집단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는지 여부이다. 이에 더해, 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와 같은 사실관계를 논

하는 사안들(예, 천안함 사건)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가치에 따라서 사안에 대한 동의나 적절성과 같은 개인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된 사안들은 세종시 수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 사업), 미디어법의 통과 및 종합편성채널의 개국(이하 미디어법),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건에서의 공권력 집행 과정(이하 용산참사), 반값 등록금, 북한의 3대 권력 세습(이하 3대 세습),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이하 전작권 환수),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이하 줄기세포), 공무원 노조 설립 및 활동(이하 공무원 노조) 등이다. 더불어 각 사안이 논란이 되었던 해에 기사화되었던 빈도를 검색하여(인터넷 포털(Naver) 뉴스 검색), 각 사안들의 상대적인 파급력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는 추후 분석에서 사안들의 특징을 분류하고 공통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들 사안들이 논란이 되었던 해와 그 일 년 동안 기사화 된 빈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다음 이슈를 읽고 동의하는 정도를 아래의 범위 내에서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지시문을 주고 동의 정도를 9점 척도(1: 매우 반대한다, 9: 매우 찬성한다) 상에서 응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라고 사

안의 명칭을 제시하고 바로 아래에 9점 척도 선택지를 주어 찬반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다만, 용산참사 사안에 한해서는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성(1: 매우 부적절했다, 9: 매우 적절했다)을 묻는 형태로 제시하였다. 모든 결과는 분석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점수가 높을수록 소위 보수적이라 불리는 정치권의 견해와 같도록 변환 코딩하였다.

절차 및 자료 분석

연구 참가자들은 먼저 성별과 나이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자기-명명식 정치성향과 변화 및 변화가능성에 대한 관점을 측정하는 척도에서의 응답이 각 정치적 사안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10가지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후에, 우익권위주의 척도 15문항, 두 가지 암묵적 이론 척도를 섞어서 제시한 6문항에 차례로 응답한 후,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치성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먼저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종속변인과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에는 사안들 간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10가지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성분별로 독립 변인들이 사안 판단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각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사안들과 변화와 변화가능성에 대한 관점을 측정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자세한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사안들 간의 상관을 보면, 한미 FTA, 4대강 사업, 미디어법, 용산참사, 세종시 수정안 등 5가지 사안들 간에 대체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이 보고되었다($r_s = .209 \sim .594$, $p_s \leq .003$). 이는 각 사안들이 해당 년도에 기사화 된

빈도를 정리한 결과(표 1 참고)와 비교해 보았을 때, 빈도수가 가장 높은 상위 5개 사안과 일치하였다. 또한, 공무원 노조와 반값 등록금 사이에 정적 상관($r = .155$, $p = .027$)을, 용산참사와 북한 3대 세습 간에 부적 상관($r = -.144$, $p = .040$)을 보였다. 독립변인 간의 상관을 보면, 먼저, 사회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과 인간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간에 매우 유의미하면서 높은 정적 상관($r = .616$, $p < .001$)이 나왔다. 이외에, 다른 독립변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특히 우익 권위주의와 자기-명명식 정치성향 간의 상관($r = .079$, $p = .260$)과, 우익 권위주의와 사회에 대한 암묵적 이론 간의 상관($r = -.102$, $p = .144$)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주성분분석

사안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결과를 효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주성분분석을 실시했다. 이 때 초기 고유값이 1이상인 성분이 묶여 총 4개의 성분이 도출되었다(표 3 참고). 본 분석의 목적은 성분을 구분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변인들끼리 묶여 독립변인의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일부 변인들은 교차요인 적재량이 .350 이상임에도 그 사안들을 제외하고 다시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첫 번째 성분은 한미 FTA, 4대강 사업, 미디어법, 용산참사, 세종시 수정안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상관분석에서 서로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던 5가지 사안과 일치하며, 표 1의 기사빈도와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이 기사화된 5가지 사안과도 일치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사안들이 공통적으로 최근 2~3년 간 국내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두 번째 성분에는 반값 등록금과 공무원 노조, 전작권 환수 사안이 포함되었다. 공무원 노조와 전작권 환수 사안은 각각 2, 3성분, 2, 4성분에서의 적재량 수준이 비슷했지만, 공무원 노조와 전작권 환수 사안 각각 3, 4성분에서의 적재량이 음의 방향으로 나왔다. 모든

표 2.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세종시 수정안 ¹	한미 FTA ¹	4대강 사업 ¹	미디어 법 ¹	용산 참사 ²	반값 등록금 ³	3대 세습 ³	저작권 환수 ³	줄기 세포 ³	공무원 노조 ³	RWA ⁴	IST ⁵	IPT ⁵	PO ⁶		
세종시 수정안	1															
한미 FTA	.314**	1														
4대강 사업	.487**	.594**	1													
미디어 법	.209**	.400**	.415**	1												
용산 참사	.288**	.440**	.479**	.438**	1											
반값 등록금	.115	.097	.128	-.038	.071	1										
3대 세습	-.030	-.048	-.072	-.088	-.144*	.025	1									
저작권 환수	-.090	.079	-.034	-.071	-.104	.103	.068	1								
줄기 세포	-.102	-.031	-.052	-.078	-.096	.043	.051	-.046	1							
공무원 노조	-.023	.075	.062	.114	.067	.155*	-.089	.049	-.029	1						
RWA	.166*	.149*	.175*	.226**	.253**	-.043	-.015	.038	-.030	.043	1					
IST	-.079	.022	-.052	-.011	.001	-.086	.028	.095	-.098	.025	-.102	1				
IPT	-.135	-.045	-.148*	.003	-.023	-.081	-.050	.099	-.048	.169*	.019	.616*	1			
PO	.050	.226**	.097	.154*	.233**	.120	-.080	.102	.059	.086	.079	-.097	.011	1		
평균 (SD)	4.539 (1.588)	3.767 (1.806)	3.137 (1.902)	3.746 (2.118)	3.019 (1.664)	2.563 (1.754)	7.820 (1.456)	4.917 (2.152)	4.354 (2.115)	4.473 (1.756)	3.486 (.373)	3.591 (.794)	3.492 (.856)	4.495 (1.406)		

주. RWA: 우익권위주의(Right-Wing Authoritarian), IST: 사회에 대한 암묵적 이론(Implicit Society Theory), IPT: 인간에 대한 암묵적 이론(Implicit Person Theory), PO: 자기-명명식 정치성향(Political Orientation)

* $p < .05$, ** $p < .01$

1: 높을수록 해당 사안에 찬성(9점 척도), 2: 높을수록 해당 사안이 적절(9점 척도), 3: 높을수록 해당 사안에 반대(9점 척도), 4: 높을수록 변화에 저항(6점 척도), 5: 높을수록 가변론자(6점 척도), 6: 높을수록 스스로를 보수라고 명명(9점 척도)

사안에 대한 판단 결과는 점수가 높을수록 소위 보수적인 정치권의 주장과 일치하는 형태로 변환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 관계인 사안들이 하나의 성분으로 묶이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두 사안 모두 정적이면서 .500이상의 적재량을 갖는 두 번째 성분으로 묶였다. 세 번째 성분과 네 번째 성분에는 각각 북한 3대 세습과 줄기세포 사안이 포함되었다.

표 3. 정치적 사안별 주성분분석 적재량

	성분			
	1	2	3	4
4대강 사업	.840	.106	.018	.011
한미 FTA	.759	.182	.021	-.097
용산참사	.715	-.044	-.228	.004
세종시 수정안	.648	-.014	.180	.053
미디어법	.648	-.087	-.249	-.056
반값 등록금	.118	.748	.046	.121
공무원 노조	-.001	.542	-.621	-.008
전작권 환수	-.114	.508	.234	-.591
3대 세습	-.068	.144	.739	.028
줄기세포	-.107	.223	.137	.811

주.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정치적 사안 판단에 변화 및 변화가능성에 대한 태도가 미치는 영향

변화에 대한 저항과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관점,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이들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실제 정치적인 사안을 판단하는 데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예측변인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인은 표준화하여 분석하였다(참고, 박광배, 2003).

먼저, 1단계 모형에는 주효과 변인을 투입하였다. 최종모형(2단계 모형)에는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곱으로 이원상호작용변인을 만들어 투

입하였다. 삼원 상호작용효과는 해석상의 어려움 때문에 분석하지 않았다. 같은 형태로 추출된 각 성분을 종속변인으로 삼아 총 4개의 회귀분석 결과를 얻었다(표 4 참고).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예측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으며, 검증 계수로는 VIF계수를 사용하였다. 주효과 변인으로 사용된 우익권위주의(1.204), 인간에 대한 암묵적 이론(1.798), 사회에 대한 암묵적 이론(1.790), 자기-명명식 정치성향(1.068)과, 상호작용 변인으로 사용된 우익권위주의와 인간에 대한 암묵적 이론(2.025),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에 대한 암묵적 이론(1.962), 우익권위주의와 자기-명명식 정치성향(1.386), 인간에 대한 암묵적 이론과 사회에 대한 암묵적 이론(1.131), 인간에 대한 암묵적 이론과 자기-명명식 정치성향(1.572), 사회에 대한 암묵적 이론과 자기-

표 4. 각 성분 별 회귀분석 모형 값.

성분	모형	R^2	ΔR^2	F	p
1	1	.126	.126	7.227	.000
	2	.183	.058	4.375	.000
2	1	.038	.038	1.965	.101
	2	.101	.063	2.186	.020
3	1	.013	.013	.668	.615
	2	.047	.034	.960	.480
4	1	.014	.014	.723	.577
	2	.055	.041	1.130	.341

표 5. 정치적 사안 성분 1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단계	변인	B	SE B	β	p	R ²	ΔR^2	F	p
1	(상수)	3.642	.087		.000				
	우익권위주의(A)	.351	.088	.266	.000				
	사회-암묵적 이론(B)	.162	.113	.123	.152	.126	.126	7.227	.000
	인간-암묵적 이론(C)	-.233	.112	-.177	.038				
	자기-보고식 정치성향(D)	.267	.088	.202	.003				
2	(상수)	3.612	.100		.000				
	A	.366	.094	.277	.000				
	B	.159	.114	.120	.167				
	C	-.175	.114	-.133	.128				
	D	.279	.088	.212	.002				
	A*B	-.183	.105	.157	.085	.183	.058	4.375	.000
	A*C	-.106	.118	-.083	.371				
	A*D	-.097	.076	-.097	.204				
	B*C	.051	.078	.045	.512				
	B*D	-.279	.095	-.248	.004				
C*D	.069	.082	-.069	.397					

명명식 정치성향(1.688)의 VIF를 확인한 결과, 가장 높은 수치는 2.025으로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는 5.00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회귀모형이 유의미한 정치적 사안 성분 1과 2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할 것이다. 정치적 사안 성분 3과 4는 하나의 사건만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회귀모형이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성분 1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표 5 참고), 최종모형에서 우익권위주의($\beta = .277, p < .001$)와 자기-명명식 정치성향($\beta = .212, p = .002$)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즉, 변화에 저항하고,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성분 1에 포함된 사안들에 대해서 보수적인 판단을 하였다. 또, 사회에 대한 암묵적 이론과 자기-명명식 정치성향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 = -.248, p = .004$). 상호작용효과의 방향을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상호작용 그림을 그렸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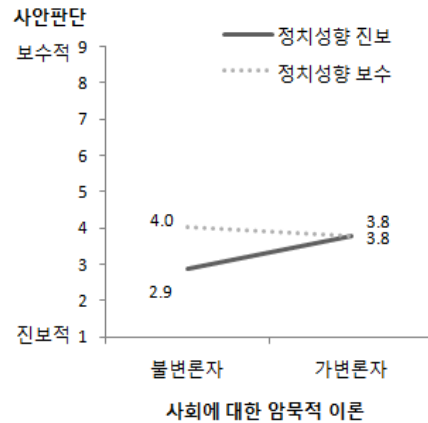


그림 1. 정치적 사안 성분 1에 대한 사회-암묵적 이론과 자기-명명식 정치성향의 상호작용 효과
 주. 사회에 대한 암묵적 이론: 불변론자 M-1SD, 가변론자 M+1SD; 자기-명명식 정치성향: 진보 M-1SD, 보수 M+1SD.

표 6. 정치적 사안 성분 2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단 계	변인	B	SE B	β	p	R ²	ΔR^2	F	p
1	(상수)	3.982	.083		.000				
	우익권위주의(A)	.004	.084	.004	.957				
	사회-암묵적 이론(B)	-.036	.107	-.030	.736	.038	.038	1.965	.101
	인간-암묵적 이론(C)	.144	.106	.120	.178				
	자기-보고식 정치성향(D)	.190	.084	.159	.024				
2	(상수)	4.049	.095		.000				
	A	.021	.089	.018	.811				
	B	-.091	.109	-.076	.404				
	C	.255	.109	.213	.021				
	D	.235	.084	.196	.006				
	A*B	.099	.100	.094	.323	.101	.063	2.186	.020
	A*C	-.068	.113	-.059	.546				
	A*D	-.085	.073	-.093	.245				
	B*C	-.122	.074	-.119	.100				
	B*D	-.253	.090	-.247	.006				
C*D	.130	.078	.143	.095					

이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참고, 장훈, 한성열, 2010). 이를 보면 사회에 대한 가변론자들은 자기-명명식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가 작았고, 사회에 대한 불변론자들은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소위 진보적인 판단을 했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판단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분 2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표 6 참고), 인간에 대한 암묵적 이론($\beta = .213, p = .021$), 자기-명명식 정치성향($\beta = .196, p = .006$)의 주효과와, 사회에 대한 암묵적 이론과 자기-명명식 정치성향($\beta = -.247, p = .006$)의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인간이 변한다고 믿을수록,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사안 판단을 보수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분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효과를 그려본 결과(그림 2), 사회에 대한 가변론자 사이에서는 자기-명명식 정치성향에 따른 판단 차가 없었지만, 불변론자는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더 보수적인 판단을 하였다. 이 결과는 성분 1의 상호작용효과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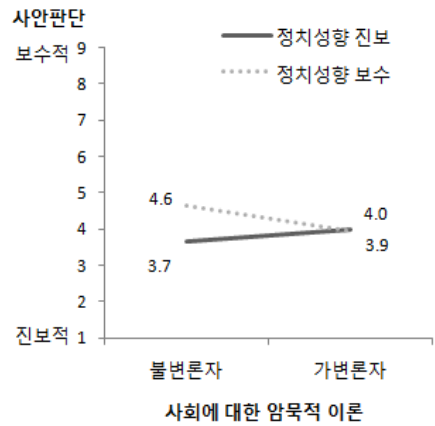


그림 2. 성분 2에 대한 사회-암묵적 이론과 자기-명명식 정치성향의 상호작용 효과

주. 사회에 대한 암묵적 이론: 불변론자 M-1SD, 가변론자 M+1SD; 자기-명명식 정치성향: 진보 M-1SD, 보수 M+1SD.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변화에 대한 저항과 사회 및 인간에 대한 변화가능성에 대한 관점, 자기-명명식 정치성향 등의 변인이 실제 정치적 사안을 판단하는 데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특히, 정치적인 판단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정치적 성향이 사용되는 순환론적인 모순을 극복하고자, 비정치적인 심리학적 변인이 정치적 사안 판단에 미치는 근본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우익권위주의와 자기-명명식 정치성향 사이의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 우익권위주의와 사회 및 인간에 대한 암묵적 이론 간의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 사회와 인간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의 유의미한 상관, 사회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과 자기-명명식 정치성향의 상호작용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변화에 대한 저항을 반영하는 우익권위주의와 자기-명명식 정치성향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상관분석 결과, 두 변인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우익권위주의를 통해 구분하는 정치적 성향이 스스로 생각하는 정치성향과 다른 구성 개념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Jost 등(2003)은 우익권위주의가 측정하는 특성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의 특성과 상당부분 겹침을 밝혔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 척도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반드시 스스로 생각하는 정치적인 성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나타낸다. 이는 최소한 한국에서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성향 외에 스스로를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다른 특징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둘의 구성 개념이 다르다는 점은 이 두 변인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성향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우익권위주의와 사회 및 인간에 대한 암묵적 이론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을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자들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를 수용하거나 저항하는 것과 그러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지 여부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가정했다. 오히려, 변

화가능성에 대한 관점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데 보다 근본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았다. 두 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오지 않은 점은, 연구자들의 예상대로 변화에 대한 저항과 변화가능성에 대한 관점이 개념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서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함을 반영한다.

세 번째로, 사회와 인간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간에 매우 높은 유의미한 상관이 나왔다. 이는 이 두 척도를 통해서 측정되는 심리적인 특성이 매우 동질적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높은 상관에도 불구하고, 회귀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주효과는 물론 상호작용효과가 개별적으로 발견되는 등 두 변인의 경향성이 같게 보고되지는 않았다. 두 변인 간 상관 자체는 매우 높았지만, 실제 사안 판단에 영향을 주는 강도나 방향이 같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변인이 서로 같은 구성개념을 측정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즉, 매우 흡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각 개념은 분명히 다른 성질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 실제로 이것이 사안 판단에 끼치는 영향 역시도 달랐다. 이는 암묵적 이론이 영역-특정적이라는 기존 연구의 결론과 일치한다(Dweck 등, 1993).

마지막으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사회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과 자기-명명식 정치성향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의이다. 사회에 대한 가변론자들은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는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불변론자들은 스스로 명명한 정치성향에 따라 사안 판단을 다르게 함이 밝혀졌다. 이는 기존의 변화에 대한 저항, 즉, 보수주의적 성향을 반영한다고 알려진 우익권위주의 변인을 넘어, 변화가능성에 대한 심리학적 변인, 즉, 사회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이 정치적인 판단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예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는 작금의 현실에서 정치적인 양 극단이 존재하고 각기의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그들이 사회를 불변적인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가능케 한다. 즉, 현재 정치적 갈등의 주체는 사회에 대한 불변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정치적 갈등 사안 판단에 대한 이러한 정치성향과 사회에 대한 암묵적 이론의 상호작용효과가 가변론자들보다 불변론자들이 더 양 극단으로 치우친 정치성향을 갖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추론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가변론자는 자기-명명식 정치성향의 분산이 작고 불변론자는 매우 크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형태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점이다. 이에 사회에 대한 암묵적 이론 척도의 가운데 값인 3.5를 중심으로 높은 점수는 가변론자, 낮은 점수는 불변론자로 범주화하여 이에 따른 자기-명명식 정치성향의 분산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불변론자의 자기-명명식 정치성향($n = 110, M = 4.41, SD = 1.36$)과 가변론자의 자기-명명식 정치성향($n = 96, M = 4.59, SD = 1.46$)의 분산이 상당히 흡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불변론자들이 가변론자들보다 더 양 극단으로 나뉜 정치성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가변론자들보다 불변론자들이 더 자신의 정치성향에 치우친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Chen 등(2009)과 Hong과 Chiu(1999)의 연구를 종합하면, 사회에 대한 불변론자들이 현존하는 규범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가변론자들은 그러한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적용시켜보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사회적인 규범은 자신과 정치적인 입장이 같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사회가 본질적으로는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보와 보수로 대표되는 자신의 정치적인 특성에 따라서 자신과 같은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치적인 판단을 따르게 되고, 그에 맞는 논리를 수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에 대한 불변론자들은 자기-명명식 정치성향에 따라서 정치적인 사안을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가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과 정치적인 성향이 같은 사람들의 주장에 고착되어 있지 않고, 좀 더 유연하게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며, 때로는 오히려 반대 양상을 띠기도 한다. 이에 따라서 사회에 대한 가변론자 사이에는 자기-명명식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

적 판단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사회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이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심리적인 변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고 판단된다. 반복적으로 논의하고 있듯이, 사회에 대한 암묵적 이론은 진보와 보수 성향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인 판단 과정의 기저에서, 정치성향이 정치적인 사안을 판단하는 양상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통계적으로도 사회에 대한 암묵적 이론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국 및 홍콩의 연구(Chen 등, 2009; Hong & Chiu, 1999)와의 일관된 해석을 고려해 보아도 주효과보다는 상호작용효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또한, 이와 비슷한 연구가 해외에서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한국 정치만의 문화적인 특징이라고 단정 짓는 것 또한 다소 시가상조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치·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한 판단과 이들 판단의 기저에 자리하는 심리적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기존에 서양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우익권위주의 성향 변인을 넘어서 그동안 다루어지지 못했던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사람들이 정치적인 사안을 판단하는 데 사회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혀낸 본 연구 결과는 학문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며, 암묵적 이론과 정치성향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만한 충분한 동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사용된 척도들의 내적신뢰도(Cronbach's α)가 낮은 점이다. 우익권위주의는 .409, 사회와 인간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은 각각 .518과 .690이었다. 이는 외국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즉, 외국에서는 높은 신뢰도를 보인 척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결과가 외국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같게 나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익권위주의 척도를 요인분석하면 초기 고유값 1 이상으로 구분했을 때, 총 6요인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래 우익권위주의 척도의 요인이 권위주의 공격성(authoritarian aggression), 약속주의(conventionalism), 권위주의 복종(authoritarian submission) 등의 세 가지인 점을 고려했을 때 (Altemeyer, 1996), 본 연구에서 측정된 결과가 외국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는 다소 다른 특성을 측정하고 있음을 제한적이거나 추론해 볼 수 있었다. 신뢰도를 높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좀 더 연구해 보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심리학적 변인들이 정치적인 사안 판단에 끼치는 영향을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선택된 사안들은 모두 과거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이었음은 분명하나, 피험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사건이 이슈화되었던 시기의 정권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사안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 반값 등록금 사안은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일으켰음은 물론, 시기적으로도 오래 전의 사건이 아니었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사안이었음은 틀림없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은 선택된 사안 중 유일하게 대학생이 이해 당사자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경우 다소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음을 간과하였다. 또한, 즐기세포는 한동안 미국에서 이의 허용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격렬했다는 점에서, 두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사안이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최근 한국사회에서 본 사안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어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연구 참가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즐기세포 사안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3대 권력 세습 사안은 극단적인 진보주의자가 이에 대한 반대를 피력하지 않으면서 암묵적인 찬성을 보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여론조사(동아일보, 2011. 12. 21.) 결과에서도 3대 세습에 비판적인 여론은 51%, 개별 국가의 사정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여론은 40.6%로, 비판적인 여론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양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전체 9점 만점에서 반대하는 의견의 평균이 7.82를 기록하였을 만큼 전체적으로 3대 세습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편향적인 결과로 인해서 본 사안에 대한 유의미한 모형을 도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연령이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을 구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라는 연구 결과(홍기원, 이종택, 2010)를 고려해 본다면, 대학생에 편중된 연구 대상자는 정치적으로도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기-명명식 정치성향(9점 척도)을 빈도분석한 결과, 진보성향자(1~3점)가 22.3%(46명), 중도성향자(4~6점)가 69.4%(143명), 보수성향자(7~9점)가 8.3%(17명)으로 나타났다. 즉, 진보성향자가 보수성향자보다 많긴 하지만, 중도성향자의 수가 많은 점은 본 연구의 피험자들이 다소나마 정치적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험자의 연령이 20대 초·중반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주요한 키워드로 삼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고민해 보았는지, 나아가 변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얼마나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20대 뿐만 아니라, 30~60대 연령을 포함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년이라는 다소 긴 기간 동안, 각자 다른 시기에 이슈화되었던 정치적 사안을 선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본 사안에 대한 판단이 20대라는 피험자의 특성, 사안의 정치적 속성, 그리고 사안이 이슈화되었던 당대의 정치적·경제적 상황 등이 혼입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주성분분석 결과 성분 1에 포함되었던 사안들은 2009년부터 2011년에 이슈화되었던 사안들로 20대 대학생들에게 친숙한 사안들이었지만, 또한 현 정권에서 추진했던 사안들로 현 정부를 지지하는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한국에서 소위 보수적 성향의 정당 출신의 대통령과 각료로 구성되었고, 추진했던 정책들도 보수적 집단들이 강력히 지지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선정된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단순히 현 정부를 지지하는지를 넘어서 진보와 보수가 갈등했던 사안에 대한 판단이었다

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선정된 사안들이 이슈화되었던 시기의 정권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론은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정치적 쟁점 사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건이 이슈화되었던 시기의 정권 및 경제적 상황 등과 피험자의 특성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하여 이러한 잠재적 혼입변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연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정치적 사안의 성분별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설명력이 약 10~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명력이 사회과학 연구에서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전체를 100%라고 했을 때, 여전히 사안 판단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는 변화에 대한 태도나 변화가능성에 대한 관점 등의 변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는 첨가하지 않았지만 ‘불평등에 대한 수용’ 등과 같이 서양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특정 대상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과 같이 새로운 변인이 될 수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짚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오성, 한형서 (2008). 한국에서 정치적 갈등에 대한 이론적 대응방안. *한독사회과학논총*, 18(1), 73-102

김형준 (2010). 한국 사회 갈등 고찰과 정치 발전 방향 모색: 정당과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의정논총*, 5(2), 129-158

김도환, 황상민, 최윤식 (2011). 정치 현상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유형과 심리적 기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83-208.

동아일보 (2011. 12. 21). [김정일 사망]20대 56.5% “北 3대세습 말도 안돼”... 50대 다음으로 많아.

박광배 (2003).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서울: 학지사.

이내영 (2011).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원인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원인: 국민들의 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들의 양극화인가?. *한국정당학회*, 10(2), 251-287

장훈, 한성열 (2010). 몰입(flow) 기능의 재구성: 몰입과 행복 관계에 대한 타인맥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43-62.

정승현, 강정인, 김수자, 문지영, 오향미, 홍태영 역, (2006). *현대 정치사상의 파노라마 : 민주주의의 이상과 정치 이념*. Terence, B. & Richard, D. (2003). *Political ideologies and the democratic ideal*. 서울: 아카넷

정은경, 손영우 (2011).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이: 간통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27-741.

정은경, 정혜승, 손영우 (2011).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이: 용산재개발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4), 93-105.

정환울, 정원철 (2009). 여론으로 본 한국 사회갈등 진단. *동아시아연구원*, http://www.eai.or.kr/type_k/panelView.asp?bytag=p&code=kor_report&idx=8940&page=1

최석만, 국민호, 박태진, 한규석 (1990). 한국에서의 진보-보수적 태도의 구조와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24, 83-102.

홍기원, 이종택 (2010). 한국 성인의 이념적 지형과 심리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1-25.

한겨레신문 (2011. 5. 15). 2002년 보수>중도>진보, 2011년 중도>진보>보수.

YTN (2012. 2. 25). 서울 도심 한미 FTA 찬반 집회 동시에 열려.

Altemeyer, R. A. (1996). *The authoritarian spect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ackstrom, M., & Bjorklund, F. (2007). Structural modeling of generalized prejudice: The role of social dominance, authoritarianism, and empathy.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28(1), 10-17.

Bergh, R., Akrami, N., & Ekehammar, B. (2010). Social identity and prejudiced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 317-321.

Blackwell, L. S., Trzesniewski, K. H., & Dweck, C. S. (2007).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predict

- achievement across an adolescent transition: A longitudinal study and an intervention. *Child Development*, 78(1), 246-263.
- Chen, J., Chiu, C. & Chan, S. F. (2009). The cultural effects of job mobility and the belief in a fixed world: Evidence from performance forec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5), 851-865.
- Chiu, C., Dweck, C. S., Tong, J. Y., & Fu, J. H. (1997). Implicit theories and conceptions of mor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5), 923-940.
- Dweck, C. S., Chiu, C., & Hong, Y. (1995). Implicit theories and their role in judgments and reactions: A world from two perspectives. *Psychological Inquiry*, 6(4), 267-285.
- Dweck, C. S., Hong, Y., & Chiu, C. (1993). Implicit theories: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likelihood and meaning of dispositional infer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644-656
- Erdley, C. A., Cain, K. M., Loomis, C. C., & Dweck, C. S. (1997). Relations among children's social goals implicit personality theories, and responses to social failure. *Development Psychology*, 33(2), 263-272.
- Erdley, C. A. & Dweck, C. S. (1993). Children's implicit personality theories as predictors of their social judgments. *Child Development*, 64, 863-878.
- Hong, Y., & Chiu, C. (1999). Social identification in a political transition: The role of implicit belief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2), 297-318.
- Jost, J. T. (2006). The end of the end of ideology. *American Psychologist*, 61(7), 651-670
- Jost, J. T. & Amodio, D. M. (2012). Political ideology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Behavioral and neuroscientific evidence. *Motivation and Emotion*, 36(1), 55-64
- Jost, J. T., Federico, C. M., & Napier, J. L. (2009).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307-337
- Jost, J. T., Glaser, J., Kruglanski, A. W., & Sulloway, F. J. (2003).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3), 339-375.
- Jost, J. T., Napier, J. L., Thorisdottir, H., Gosling, S. D., Palfai T. P., & Ostafin, B. (2007). Are needs to manage uncertainty and threat associated with political conservatism or ideological extremity?.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7), 989-1007
- Kammrath, L. K., & Dweck, C. (2006). Voicing conflict: Preferred conflict strategies among incremental and entity theoris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1497-1508.
- Leone, L. & Chirumbolo, A. (2008). Conservatism as motivated avoidance of affect: Need for affect scales predict conservatism measur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 755 - 762
- Levy, S. R., Plaks, J. E., Hong, Y., Chiu, C., & Dweck, C. S. (2001). Static versus dynamic theories and the perception of groups: Different routes to different destin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2), 156-168.
- Levy, S. R., Stroessner, S. J., & Dweck, C. S. (1998). Stereotype formation and endorsement: The role of implicit the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21-1436.
- McHoskey, J. W. (1996). Authoritarianism and ethical ideolog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6(6), 709-717
- Miller, C. H., Burgoon, J. K., & Hall, J. R. (2007). The effects of implicit theories of moral character on affective reactions to moral

- transgressions. *Social Cognition*, 25(6), 819-832.
- Molden, D. C., & Dweck, C. S. (2006). Finding “meaning” in psychology: A lay theories approach to self-regulation, social perception, and soci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61(3), 192-203.
- Molden, D. C., Plaks, J. E., & Dweck, C. S. (2006). “Meaningful” social inferences: Effects of implicit Theories on inferential proces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 738-752.
- Thorisdottir, H., Jost, J. T., Liviatan, I., & Shrouf, P. (2007). Psychological needs and values underlying left-right political orientation: Cross-national evidence from eastern and western Europe. *Public Opinion Quarterly*, 71(2), 175-203.
- Zakrisson, I. (2005). Construction of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 863-872.

The Implicit Theories of Human and Society in Political Preferences

Jin an, Lee Seung-Hyuk, Choi Taekyun Hur
Korea University

Resistance to change (Right-Wing Authoritarian: RWA) has been proposed as a primary psychological factor to explain various political preference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autology in the explanation, the present study proposed and investigated the roles of the Implicit Theory - incremental versus entity beliefs about possibility of change in certain domains, such as individual, society, etc. - in political judgments. 206 participants reported their preference toward 10 political events controversial in Korea for the past 10 years and completed the scales for RWA, the Implicit Theory of individual and society, self-categorization on political orientation. At first, the correlational analyses and subsequent hierarchical multi-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e main effects of self-rated political tendency, in which Korean people who perceived themselves more politically conservative made more conservative judgments on political issues. Furthermore,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implicit theory of society and self-categorized political orientation. Specifically the political conservatives and liberals who believed the incremental theory of society did not differ in political preference. But among the entity theorists of society, the liberals compared to the conservatives made more liberal judgments.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 of the effect of psychological variables on political judgments was discussed.

Keywords: implicit theory, right-wing authoritarian, political tendency, conservatism and liberal, political psychology

1차원고 접수일 : 2012년 04월 09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2년 05월 23일
게재 확정일 : 2012년 05월 24일